

‘바람 잘 날 없는’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의 노조원들이 이례적으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원장이 부임 전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디자인센터 안팎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모 디자인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디자인센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폐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디자인센터 원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지난 2016년 4월 취임 전에는 원장이 대표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7월 광

원장 부인 회사 광주시 상대 소송 패소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 처분은 적법’

주디자인센터가 추진한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돼 2개 품목 1억213만675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공고에는 기업단 2개 분야 신청이 가능하되, 1기업 1품목에 한해 지원토록 명시됐으며 기업단 지원금액을 최대 5600만원으로 제한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4600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디자인센터가 요청한

처분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센터 원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회사에 부당한 지원금이 지급됐고 원장 취임 후에는 이를 회수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 노조는 인사권 남용과 직원탄압 등을 이유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원장이 2년여 동안 24차례 직원 전보인사를 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인사를 예고했다”며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디자인센터 노조는 이미 박 원장 해임 건의문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디자인센터 원장 등의 부적정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은홍 기자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제동’ 감사원 감사

순천시의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추진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대상이 되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청구한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 낭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과는 16일부터 20일 까지 5일간 순천시청을 방문해 예산 낭비 여부 등 감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출렁다리 설치비 25억 원, 인근 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시민 체험과 전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을 추진했다.

봉화산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 좌경 골 계곡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전율과 보행을 체험하는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 이었다.

실제 봉화산 둘레길은 2016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전국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순천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대표 명소라는 점에서 출렁다리가 더해질 경우 다양한 연계 효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 설치가 생태 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인 데다,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폭염 기승, 양계농가는 ‘한숨’ 폭염이 기승을 부린 18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농장주가 더위를 못 이기고 죽은 닭들을 골라내고 있다.

4대강사업 중 영산강 관여 훈·포장 91명 서훈 취소 목소리

4대강 공사 과정 중 영산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91명이 훈·포장과 표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이고 국고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며 공적 재심의와 서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훈포장 인사 1152명 중 91명은 영산강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훈·포장과 표장을 받았다.

서훈자 소속을 살펴보면, 정부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의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시·전남도·나주시·농어촌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경찰청)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등 기업인 37명,대학 교수 등 대학교 관계자 5명, 영산강뱃길살리기 운동본부 등 단체 관계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이고 국고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며 공적 재심의와 서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서훈 종류는 국무총리포장 47명, 대통령포장 24명, 근정포장 8명, 산업포장 5명, 흥조근정훈장 2명, 녹조근정훈장 1명, 석탑·동탑·은탑·철탑사업훈장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수여 배경(공적사항)으로는 ‘예산 확보·시공 감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노력한 공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보했다’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을 저지하고 민원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반면, 병풀보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재해 예방에 앞장섰다’는 등 당시 정부의 자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환경단체는 분석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 결과 영산강은 보건설 이후 매년 일부 수질 악화와 남조류가 발생, 환경 파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도 0.01(100원 투자 1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물 부족량의 4% 가량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 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환경영향평가 축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풀보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재해 예방에 앞장섰다’는 등 당시 정부의 자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환경

최남규 기자

kf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화생자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화생자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명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
창기자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미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경영화생자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재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증·경영 정착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임대차·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화 지원